

투데이칼럼

과소화 되고 있는 위기의 농업농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부는 농업에 대한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정한 1967년 1월 16일 제정했다. 이 법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하여 그 자연적 경제적 제약을 보정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 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격, 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종사자와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 시키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70년 1월1일 제 1차 개정에서,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심의회를 구성 하도록 했다.

1999년 2월5일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7년 3월21일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확대개정 됐다.

농업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명칭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2000년 농정심의회, 2008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른다. 이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식품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농업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시 이제 소비자의 수준에



정승모 장수군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맞는 먹거리를 식품으로 제조하는 것 까지를 고려해서 생산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정책예산 수립에 대한 예산도 정책화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농업관련 국정과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5대 전략과제가 들어가 있다.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100원 택시확대로 농산어촌의 교통, 의료, 주거여건 개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지원, 농지연급 신규상품 도입,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경제적 모델 정립 하고 농산어촌의 관광상품

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활동과 연계하여 건강, 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쌀을 시장격리 하여 사료용 비료 전환하고 주요 농산물의 의무 자조급 조성 및 생산안전제 확대, 친환경농업직물 단가인상, 재해 시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인상, 농어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2018년 유어제,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 달성 등이 세부내용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전략과제를 보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설치, 농어업회소 설치, 협치 참여행정,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 정착지원 강화,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 동물복지농축산업 확대,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하고 좋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비중 있게 추진 되어야 할 사업은 '푸드플랜'이라고 판단된다. 푸드플랜의 실행을 통해 먹거리 생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지되며 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농업이 먹거리의 단순 조달을 넘어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할 수가 있다.

매 정권마다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왔으나 농촌은 여전히 과소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농업의 경쟁력은 생산성향상 보다는 소비유통분 분야에 있다고 본다. 지식기소, 로컬푸드, 6차산업, 육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 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생산자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생산자에게 더 많은 생산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푸드플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 유통,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사회운동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이 불안하고 농업농촌지역의 유지기반이 약화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과소화 진행을 막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 푸드플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사설

도내 도로들 노후화 심각

도내 도로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국도며 지방도가 두루 그렇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도로 노후화의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다. 현재 시설 개량 대상의 도로는 국도가 여덟 구간이고 지방도는 아홉 구간이다.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SOC 투자가 어렵다는 말만 되뇌일 게 아니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작업을 서둘러야겠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영호남 SOC 공동건의문을채택한 것과 관련해

세월을 기다려선 안된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여태 후속 움직임이 없으니 이상하다. 전북도는 예산에 호기롭게 말한 적이 있다. 2030년까지 도로 건설과 철도 건설과 합한 건설 등 113건의 사업을 위해 23조 9천여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던 게 생각난다. 그같은 구상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원대했다.

2030년까지 멀리 내다본 것도 그랬고 투입 액수가 거의 24조원에 육박한다는 것도 그랬다. 그러나 그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조심스럽게 지적

할 것이 있다. 아쉬운 쪽은 우리 쪽이지 영남쪽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앞서서 나가야 한다. 도민을 상대로 청사진을 그려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이다. 현 정부의 국토부가 전임 정부의 국토부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래도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 한다.

행여 전임 정부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 때 국토부의 5개년 계획을 보고서 불만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풀이해보아도 정당하다.전북 뚝의 고속도로 건설이 전국 대비 1.3%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주와 대구간 건설 건은 언급조차 없음에도 경북과 경남권은 고속도로 건설 건이 무려 일곱 건이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계 캠퍼리 대회 성공 프로젝트를 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도내 도로들의 노후화가 오래됐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로 정비와 SOC 확충과 관련해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더 힘차게 뛰어야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북 7곳 성공 기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모양이다. 도내 대상지역은 전주가 2곳이고 정읍 김제 남원 부안 고창 등이 1곳씩이다. 제 각각 도시 재생의 성격을 보면 특색이 있다. 전주는 '중심시가지 살리기'와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다. 정읍은 '공기업 제안형'이고, 김제는 '중심시가지 살리기'형 이다.남원과 부안은 "일반 근린형"이고, 고창은 '주거지 지원형'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뉴딜사업 공모에 응한 결과 그런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분명히 제 몫 잡기의 표본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앞으로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야겠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비에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몰가 인상을 감안해도 50조 원은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의 예산이 아직 7조 원이 못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계속 주목하라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는 사업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제 몫 찾기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방에도 말했다시피 방심했다가는 대도시 같은 광역자치체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음이다.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해 제 몫을 지켜야 한다.

본보는 도시 재생 사업에 목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말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했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기회를 미루고 있는 다른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발전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당부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피해자 구조제도, 알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의 부모님, 또는 자식이나 남편이 가해자에 의해 심한 부상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사건 가해자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고, 그 피해로 인해 가족들의 삶이 상당히 불안정해 졌다면? 혹은 가해자가 합의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

강력범죄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운다 한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게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법(제도)이다.

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많은 관심과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각으로 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제정되는 기운

데 이 제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범죄피해 보상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유족에 한해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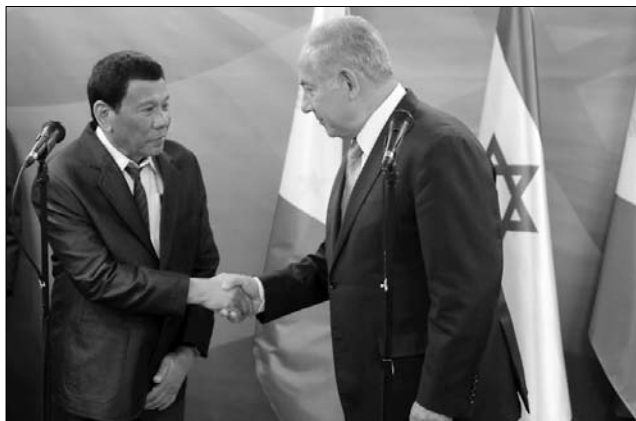
신청방법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 지원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면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고나면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을 산정해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

홍유경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히틀러 홀로코스트는 정신나간 짓"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예루살렘 근교에 세워진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바셈 메모리얼(Yad Vashem memorial)을 방문한 자리에서 "홀로코스트는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근대 세계에 흑군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